

대학교육 개혁과 인문학의 위기

윤 평 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대 학사회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세계화나 국가 경쟁력 확보의 명분을 업고 숨가쁘게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그동안 경쟁의 무풍지대였다고도 볼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차원에서 무한경쟁의 대열에 앞다투어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명시적 지표명과 함께 각 대학들이 발표하는 다채로운 개혁안은 이같은 사태변화의 생생한 예증이다.

급변하는 현실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변화는 필요하며 또한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동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은 그 자체의 성격상 개혁목표의 수렴이나 변화의 과정과 절차가 '교육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민주주의라는 큰 목표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면, 목표 자체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금의 대학교육 개혁 작업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율화를 대전제로 내세우는 개혁이 타율적 조치에 주로 의존함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변화의 능동적 주체여야 할 각 대학들도 개혁의 목표나 비전을 차별하게 성찰할 여유가 없이 '위로부터의' 체근에 휘둘려서 급조된 발전계획안들을 한전주의 방식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기 일쑤며, 일방통행식으로 남발되는 듯한 각종 정책들은 자율화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반성에 기초해, 구체적인 한 예로서 학부제 도입 문제를 살펴보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학부제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은 설득력을 지닌다. 정원 늘리기의 방편으로 이용된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 학과 이기주의의 부작용, 그로 말미암은 국제 경쟁력 상실 등이 흔히 지적된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학교의 특성이나 교육목표를 뒷전으로 돌린 채 정부의 종용에 의해 줄속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가운데, 또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우선 학부제는 예전에 시행되었다가 착근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동안 본질적인 상황변화가 있어서 지금 실시하면 그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상도하게 된다. 경쟁력 강화나 세계화라는 국가 정책목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광범위한 호소력을 갖는 대답 중의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이라는 표현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연관을 지닌다. 단순히 국민소득 몇 만 불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계량적 지표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삶의 여러 섬세한 단면들을 싸잡아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며, 멀지않은 미래에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선진국의 의미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OECD 회원국으로의 진입은 선진국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은 일정한 경제적 성취 외에,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인간중시, 사회정의,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 자발적 질서외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의 덕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경제와 더불어 이러한 덕목에 대한 일반의 감수성과 사회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덕목과 에토스는 비판적 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문주의 정신에 의해 비로소 출발하고 강화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잘살아 보자는 효율성의 논리가 민족의 역량을 단기간에 극대화시키면서 5천년래의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그 와중에 빚어진 역기능과 사회적 부작용을 절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형참사들이 보여주듯 천박한 경제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공공의식과 질서관의 결여, 극단화된 집단 이기주의 등 예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의무교육이 일반화된 오늘날 사회화의 과정은 정확히 교육의 도정과 일치한다. 바꿔 말하자면 위에서 지적된 여러 난맥상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가정, 학교, 사회)을 통한 사회적 훈련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 오늘의 한국인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인 것이다.

산업화의 미명 아래 묻혀지고 폄하된 인문학적 감수성은 일상화된 실용주의의 지배에 대항하고, 좋은 삶의 실현을 근본적 차원에서 모색하는 비판적 이성으로 구체화된다. 압도적인 현실적 추세나 경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끈기있게 질문을 던진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박한 경제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지배적 화두인 효율성의 논리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비판적 공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실용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산업화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 묻고, 좋은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비판적 정신의 계발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이 두 목표들은 긴장관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을 운위할 때 이 둘 모두에 대한 균형잡힌 고려가 필수적이다. 대학교육 개혁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만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

윤평중/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 맑스주의』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